

대중국 지방외교 과제와 전략(요약)

목 차

- I.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 II.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III.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 VI.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I.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변환

01 지방 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지방 정책 수요 시장의 형성

◆ 냉전해체에 따른 지방의 국제무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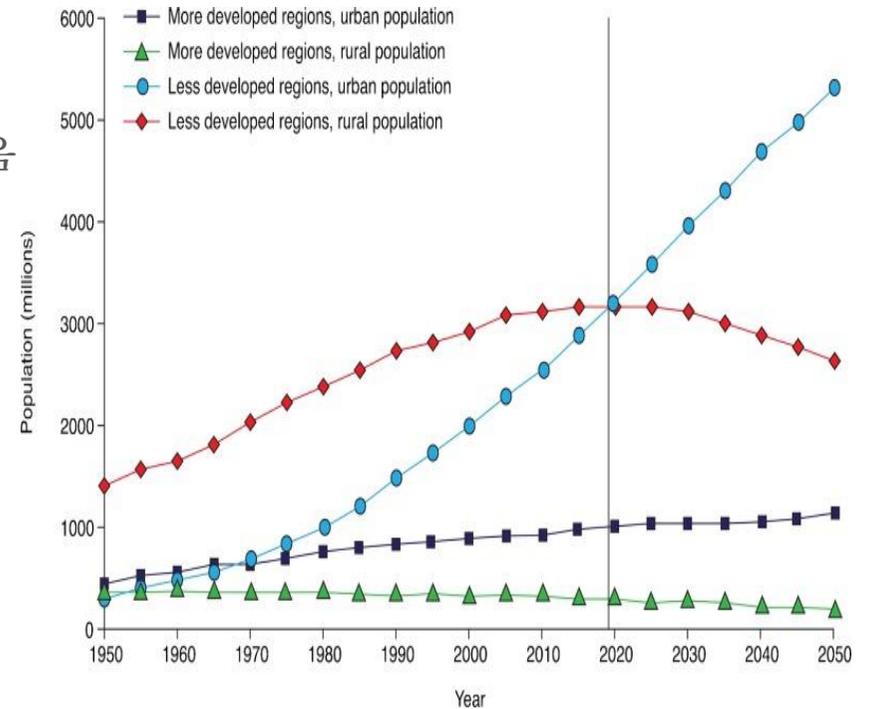
- 냉전시기는 진영논리가 압도적이어서 지방은 국제무대를 벗어나 있었음
- 1990년 구소련 해체 이후 지방이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게 됨

◆ 신흥국의 근대화 물결이 가져온 산업화 도시화

- 개발도상국, 체제전환국이 본격적인 산업화, 도시화 길을 걸음
- 국가개발정책뿐 아니라 지역정책 노하우에 대한 수요 폭증

◆ 신자유주의에 의한 지방정책시장 형성

- 상하수도, 대중교통, 난방, 전력, 도로, 임대주택 등 분야는 전통적으로 지방공공부문이 담당
-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공공인프라시장(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투융자)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



[그림] 세계 도시화 추세

출처 :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UN(2012)

02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정책수요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대응

◆ 도시(지역)공공정부 차원의 해외 시장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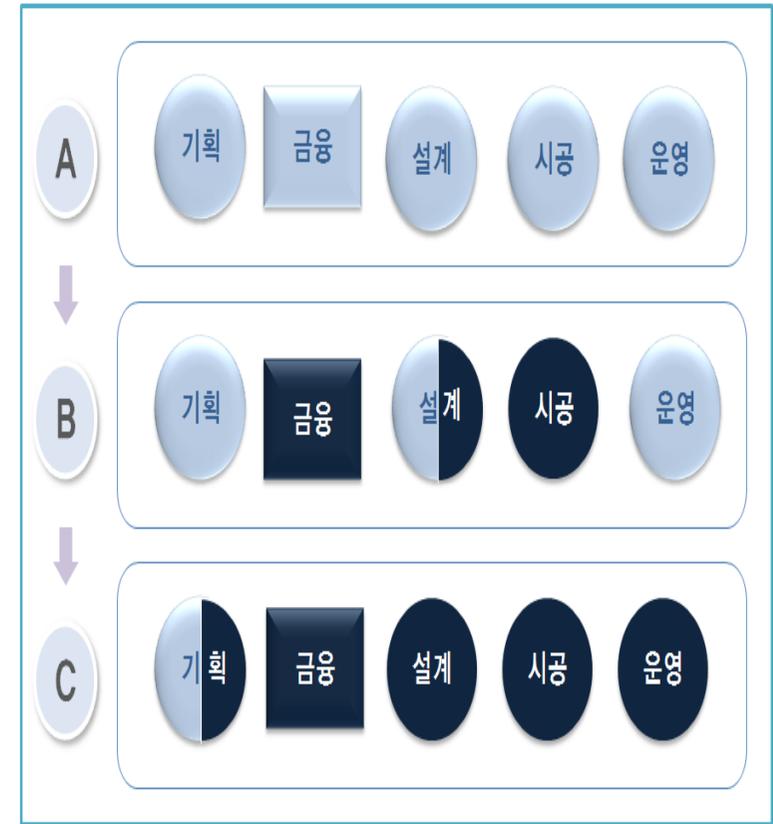
- 일본 모델: 기술원조, 자매결연 등 비영리사업을 위주로 파트너의 기술과 표준 선점
- 프랑스모델: 해외에서 공공부문이 영리적 활동 전개
- 네덜란드 모델: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상지원을 하며 시장공동진출 방식을 선호
- * 무상원조는 신흥국 지역(도시)이 원하는 노하우나 자금을 공급하는데 한계

◆ 국제기구의 대응

- 지방의제 21, 해비태트 II 등 지구적 문제에 지방정부 참여의 중요성 부각
- 비영리 시민단체, NGO의 중요성

◆ 글로벌 기업들이 공공인프라 및 정책 시장에 진입

- 지멘스는 2012년 IC본부(Infrastructure and Cities)를 신설, 인프라 시장 진출
- GE는 에너지, 교통, 물 시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설정, 대규모 투자



* 주 : 공공 민간 금융은 도시인프라 가치사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추가 표기함

[그림] 도시인프라 사업의 가치사슬 상 민영화 추세

03 | 지방공공외교 지형의 전환

우리나라 공공외교의 전환

◆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 → 선생으로 전환

- 외무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설립(1991)
- OECD 가입(1996년)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
- KDI가 개도국에게 개발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KDI School 개설(2004)

◆ 지방정부의 외교 드라이브

- 포항시, NEAR 사무국 유치(2005); 인천시, GCF 사무국 유치(2012); 서울시, MITI 연수원 유치(2014)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외시장 진출 (2012)
- 인천시,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CEO 연수프로그램 운영(2014)

그림1 브루나이 PMB성 인프라개발 컨설팅 사업 계약 (2012년 8월)



그림2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개선사업 1차 사업 준공 (2014년 2월)



[그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해외진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報 道 資 料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배포일시	2014년 월 일() 총 8매	
배포 인천발전 기관 연구원	담당자	•☎ (032)260-2671(김수한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032)260-7733(김현수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원)	
보도일시	2014년 8월 2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프로그램 진행
 - 8.24~8.29 중국 기업인 대상 강좌 및 현장수업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은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국 텐진시 국유기업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중국 텐진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와 텐진사회과학원의 의뢰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에는 이자즈(尹家智) 텐진중앙계약유한공사CEO 등 텐진시 주요 국유기업의 사장, 부사장급 25명이 참가한다.
- 연수프로그램은 한국과 인천 경제·산업 현황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진 등의 전문강좌와 현장수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인천시 중국 텐진 국유기업 연수 수행

II.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01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변천과정

◆ 내용적으로 초기 교류협력→ 최근 통상지원으로 중심 이동

-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기점으로 대외교류가 통상지원으로 중심 이동
- 교류 대상지역이 유럽, 미국에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무게 중심 이동

◆ 조직상으로 국제통상국(실) 중심으로 국제업무가 운영되고 있음

- 1998년을 기점으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 업무 담당 * 이전에는 국제통상협력실(1994), 국제협력관실(1996)
- 이에 따라 국제교류협력은 주로 통상지원 위주로 진행

◆ 도와 시군별 인력 조직 편차가 극심

- 도는 전담조직인원이 33명(2016년)
- 시군은 잘해야 팀 수준임: 시군은 지역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임 ex) 당진시 대외협력팀(5명) vs. 청양군 담당자(0.5명)

02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①

◆ 공공외교의 전략적 관점 미약

- 자치단체장의 의도에 따라 방향성 변화 → 즉흥성 강함, 단기성과 내기에 조급
- 이에 따라 공공외교의 중요성 폄하 →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공공외교의 통상 편중

- 현 충남의 공공외교는 투자유치, 수출지원, 관광객유치 등 통상지원에 집중
- 통상지원 편중은 공공외교를 통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형해화
- 통상지원 업무를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주도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비판 제기
 - 통상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으로 이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불합리
 - 통상 관련 의사결정의 관건이 되는 자원이 각 지방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홍보 활동임
 - 각국의 지자체와 민간의 관계가 나라마다 달라 호혜성이 미흡

03 |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충남 지방공공외교의 문제점 ②

◆ 국제교류관계를 둘러싼 혼선

- 초창기 인맥을 통한 외교관계 수립이 시정되지 않은 채 누적
- 친선, 통상, 정책은 각각 다른 파트너 선정 기준이 있음
- 교류형식 즉 자매결연, 우호협력, 일반 협력 간 불균형

◆ 교류 콘텐츠 미비

- 충남은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체계가 없음
- 충남의 지역정책의 해외 이식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교류 진행, 축적 기제 실종

구분	친선	통상	정책
파트너 선정기준	친밀성 필요지역 혹은 친한 지역	상호보완성	공통성
주요활동	문화, 스포츠 교류 공무원 교환 근무	중소기업 수출지원, 투자, 관광객 유치	정책 교류 및 협력 공동 행동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적대, 불신 해소에 유효 · 교류의 역사가 짧은 상황에서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간주되어 주민동의 확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간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고 지속가능성 있음 · 세련된 방식으로 국제적 위상 제고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의 뒷받침이 없으면 적극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성에 의문 · 경쟁우선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외교의 제는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정책적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주민들의 동의 확보가 쉽지 않음

[표] 국제교류 지역 선정의 기준 비교

Ⅲ. 충남 지방공공외교3.0 전략

01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비전



◆ 충남의 글로벌 위상 변화에 걸맞은 지방공공외교

- 충남은 지난 20여년의 경제성장 결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신산업지구이자 도농혼재지역으로 변모(홍원표, 2016)
- 학술적으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위성형 신산업지구에 해당(송두범, 2015)
- 충남은 지역정책 교류 영역에서 학생 → (교생) → 선생으로 지위 전환

◆ 충남의 미래발전전략과 시너지를 일으키는 공공외교

- 『충남 2030 경제비전』, 환황해전략의 핵심의 성공은 국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필패
- 충남 일자리의 미래는 서비스업의 발전에 있는데, 국내시장만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의 발전은 현실성 없음
- 충남은 현재 2.0에 머무르고 있어 3.0으로 도약해야 함

02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핵심 전략



① 충남 공공외교의 전략화

- 기존 공공외교의 즉흥성과 의전성을 탈피, 충남의 국제적 지위 제고에 초점
- 공공외교를 도정의 핵심전략의 일부로서 재정립

② 충남 정책 콘텐츠의 국제화

- 충남 지역정책의 경험과 노하우의 국제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
-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자료화, 표준화, 모듈화, 다국어화 할 것
- 충남의 정책 노하우를 외국 지자체와 교류·전수할 채널 확보

③ 충남의 국제협력 세력화

- 동아시아에서 충남의 전략적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 의의가 있는 분야에서 국제협력 행동 추진

03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의 주요 정책

◆ 충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 '공공외교법' 시행을 주도적으로 맞이하고 공공외교정책의 제도화를 도모
- 이를 통해 기존 도 및 시군의 국제자매결연 관계의 재정비 추진

◆ 충남 지역정책의 국제연수프로그램화

- KDI School 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충남 지역정책 사례의 연수프로그램화 기반 구축
- 도청, 충남연구원, KDI School, 지역대학, 충남공무원교육연수원 등이 협력하여 연수프로그램 수행(2020년 목표)
- * 장기적으로 도립대학에 공공정책대학원 설립 등 방법을 통해 장기발전방안 모색

◆ (가칭) '아시아 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 구축

- 충남과 글로벌 위상에 공통성이 있는 동아시아 지자체들과 (가칭)아시아신흥공업지역지자체연합(ANIRA) 창설
- 국내 충남, 충북, 중국 허베이, 장수, 일본의 ***을 주축으로 구성
- 초기에는 각 지자체 ThinkTank의 연합을 시작하고, 후에 지자체간 연합으로 발전
- 내용적으로 회원 간 공동의 사업 추진: 국제창업지구 동시 운영, 3농 혁신 사례 공동 발굴 및 표창 등

04 | 충남 지방공공외교 3.0 전략

지방공공외교 3.0 추진체계

◆ (가칭) ‘글로벌 충남 추진단’ 설립

- 도청, 충남연구원, KDI,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관학연 조직 구성
- 2-3년의 한시조직으로서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자매결연관계 정비, 충남정책 프로그램화, ANIRA창설 기반 구축 등 총괄
-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며, 필요 시 지역대학 총장, 충남연구원 원장과 공동위원장을 구성할 수 있음

◆ 통상 기능과 국제교류협력 기능의 분리 운영

- 국내외 사례를 보면 통상 기능을 제외하고 정책 교류가 핵심적 영역을 차지
- 지방외교 4.0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 도와 시군 간 협력체 구성

- 도 정책의 대부분은 하위 지역단위에서 구현 → 시군 단위를 떠나면 도 정책은 공허해 짐
- 도와 시군 간 국제교류역량 격차는 심한 편 → 실질적 협력과 역량 격차의 상향평준화 위해 협력체 필요

IV.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01 |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중국 중심의 지방외교?

◆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 한중 양자외교에 집중해야 한다

- 한반도 지정학적 지위가 세계적으로 중요해진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접점이기 때문
- 중국과의 교류는 다자간 외교와 양자 외교를 병행해야
- * 8월 귀주성에서 열리는 한중일 3농포럼은 왜 취소되지 않을까

◆ 중국을 국가라기보다는 대륙으로 보자

- 중국 13억 인구(EU 27개국 5억 인구), 지방 행정 위계 4단계(우리나라 3단계)
- 격식 vs. 실용 → 지방외교의 중요성 부각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은 4-5개 경제권으로 보고 각 경제권과의 교류협력을 별도로 수립해야 함 * 충남은 중국 각 권역별로 파트너를 가져야 함

02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중국 교류 특수성, 판시(關係)?

◆ 중국 정치사회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한 판시론의 배경

- 법치주의, 민주주의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관료나 관리층의 재량 범위가 상대적으로 큼
- 역사적으로 극심한 내란을 반복 경험하여 이너서클의 형성이 비교적 강함(내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함)

◆ 판시론에 담겨진 다양한 문제의식

- 판시는 개인적 친분 또는 신뢰의 의 중요성 강조 → 다른 나라나 민족은 본질적으로 다른가?
- 상호이익 관계가 아닌 상황(불확실성이 큰 사안)을 개인 판시로 돌파하려는 경향을 합리화 도구로 오용: 민간에서 흔함
- 우리나라 대외교류 공무원 담당자는 변동이 잦은 것에 대한 합리적 비판
- 문제는 전략과 단계적 성과에 대한 목표의식 부재 →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신비화하는 경향으로 빠져

03

대중국 지방외교 관련 생각해 볼 점

도와 시·군은 무엇을 할 것인가?

◆ 지방공공외교 4.0의 단초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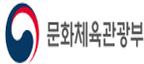
- 친선(1.0), 통상지원(2.0), 정책외교(3.0)를 포함하면서 국제교류협력 주체로 민간 (지역언론,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자리잡는 것
- 지방공공부문은 민간의 국제교류협력의 촉진자와 인도자로서 역할 정립

◆ 지방공공외교4.0의 핵심 추진체계는 국제교류 지방 거버넌스임

- 현재 충남은 지방외교의 주체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대학 따로, 종교단체 따로, 지자체 따로)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우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장기 플랜과 전략의 수립)

◆ 도는 시군과 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함

- 환황해 국제포럼에 시군, 민간의 목소리와 활동을 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 시군의 우수사례(민간활동 포함)에 대한 공식 인정과 표창·포상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3. 2(목) 1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9쪽(붙임 7쪽 포함)	
배포일시	2017. 3. 2(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담당과장	정영석(044-203-2561)	담당자	김성겸 사무관(044-203-2562)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정안 국회 통과
 - 문화교류 진흥 법적 기반 조성 및 민간 차원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